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

2023. 8. 11.

목 차

1. 법인세율 인하	1
2.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2
3. 일반 R&D(당기분) 세제지원 확대	3
4.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	4
5.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6
6.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 납세담보 허용	8
7.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9
8.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	11
9. 디지털전환 투자 촉진 세제지원	12
10. 최저한세제도 개선	13

1

법인세율 인하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G7 평균 20.9%, OECD 평균 21.5%를 상회
 -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은 투자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
 - * 최고세율('15년→'21년): OECD 평균 23.5 → 21.5, G7 평균 25.0 → 20.9, 한국 22.0 → 25.0, 미국 35.0 → 21.0, 일본 23.9 → 23.2, 프랑스 38.0 → 28.4, 영국 20.0 → 19.0, 이탈리아 27.5 → 24.0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조세수첩)
 - 한국은 '18년부터 3천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25%)하고 '23년부터 24%를 부과하고 있어 글로벌 조세 추세에 역행
 - *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구간별 1%씩 인하되었으나 기업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
- 2020년 기준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 2.7%에 비해 한국은 3.4%로 높은 수준
 - * 캐나다 4.2 일본 3.1 영국 2.3, 프랑스 2.3 이탈리아 2.1 독일 1.7 미국 1.3
-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율 유지는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해외로 자본유출을 심화(순유출(A-B): '17년 220.7억 달러 → '22년 467.2억 달러)하는 등 경제활력 저하 우려
 - * 설비투자지수(통계청) : ('15년) 100.0 ('16년) 101.7 ('17년) 116.4 ('18년: 3천억 원 구간 신설) 112.1 ('19년) 105.8 ('20년) 112.0 ('21년) 122.7 ('22년) 126.7
 - ** 해외직접투자(A, 달러) : '17년 450.2억 → '22년 771.7억(321.5억 증가)
 - *** 외국인직접투자(B, 달러, 신고) : '17년 229.5억 → '22년 304.5억(75억 증가)

□ 건의내용

- 주요 선진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경제활력 제고 필요
 - (1안) 과표 2억 원 이하 5% 2~200억 원 이하 10%, 200~3,000억 원 이하 15%, 3,000억 원 초과 20%
 - (2안) 과표 2억 원 이하 5% 2~200억 원 이하 15%, 200~3,000억 원 이하 17%, 3,000억 원 초과 20%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시 경제적 효과>

	총고정자본형성	취업자 수	GDP
단기	0.46%	0.13%	0.21%
장기	2.56%	0.74%	1.13%

* 김학수,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경제포럼』, 제10권 제3호, 한국경제학회, 2017

2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차등 운영 중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현황(%)>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시설투자 등)			
	당기분			증가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2배 한도)
	중소	중견	그 외		중소	중견	그 외	
일반연구개발	25	8~15	2	중소50, 중견40, 그 외 25	10(12)	5(7)	1(3)	3(10)
신성장·원천기술	30~40	25~40 (코스닥)	20~30	-	12(18)	6(10)	3(6)	3(10)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30~40		25	15	15	4(10)
중견 적용범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23년 1년간 한시 적용

-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R&D 및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세제지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
 -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6%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으로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지만, 현행 중견기업 구간은 매출 규모에 따라 R&D 및 투자 세제지원을 차등

□ 건의 내용

- R&D 및 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2조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당기분 방식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매출 5천억 원 미만) 8~15%, 대기업 0~2%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감소세지만 후발 신흥국과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우주·항공, ICT 등 일부 신산업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분야별 기술 수준('20년)

[한국] 전체 80.1, 우주·항공·해양 68.4, 생명·보건의료 77.9, 에너지·자원 80.2, ICT·SW 83.0

[중국] 전체 80.0, 우주·항공·해양 81.6, 생명·보건의료 78.0, 에너지·자원 81.6, ICT·SW 85.7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18	'20	'18	'20	'18	'20	'18	'20	'18	'20
기술수준(%)	76.9	80.1	76.0	80.0	87.9	87.3	94.8	95.6	100.0	100.0
기술격차(년)	3.8	3.3	3.8	3.3	1.9	2.0	0.7	0.7	0.0	0.0
기술수준 그룹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선도	선도	최고	최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 기술수준평가, '21.4월

-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79.1%*로 주요국 중 높은 수준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R&D 지원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주요국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중 : 한국 79.1%, 미국 73.9%, 일본 79.2%, 독일 68.9%, 프랑스 65.8%, 영국 66.6%, 중국 76.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 한편, 중견기업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설비투자과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 중견기업 설비투자/평균 신규 채용 추이 : ('16년) 23.2조 원/56.8명 → ('18년) 24.2조 원/40.4명 → ('20년) 19.0조 원/46.2명 → ('22년 계획) 14.5조 원/34.4명(중견기업 기본통계)

<중견기업 R&D 투자 추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R&D 투자금액(억원)	78,224	77,213	78,171	81,106

* 중견기업 기본통계

- 그러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차에 따라 급격히 축소되어 연구개발 투자 확충이 용이하지 않음

* 중소기업 25% → 중견 1~3년 차 15% → 중견 4~5년 차 10% → 중견 6년 차 이상 8%

- 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요인* 1순위는 조세부담으로, 실제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18.0%)보다 높은 수준

* 회귀 검토 요인 : 조세지원 축소 58.0%, 금융지원 축소 15.4%, 판로 제한 14.8% 順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법인세 실효세율('20년 신고기준) : 전체 17.5%, 상출 18.0%, 중견 18.3%, 중소 13.1%, 기타 21.1%(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첩)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필요

- R&D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소→중견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중견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R&D 투자 기반 마련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5% 상향 시 매년 8조 8,481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취업유발 인원 및 고용 유발 인원이 각각 138,187명, 99,32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재정학회,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9.2월)

□ 건의 내용

-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공제율 상향

* 중견기업 범위 : (現)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 (案) 전체 중견기업 or 2조 원 미만

** 공제율 : (現) 중소 25%, 중견 8~15%, 대 2% → (案) 중소 25%, 중견 13~20%, 대 7%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중소기업 30~40%, 중견* 25~40%, 그 외 기업 20~30%를 법인세에서 공제('24.12.31까지)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

-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 차 등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 지정하여 R&D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추이 : ('19년) 11개 분야, 173개 기술 → ('20년) 12개 분야, 223개 기술 → ('21년) 12개 분야, 235개 기술 → ('22년) 13개 분야, 260개 기술

- 그러나,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지원 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대다수(92.1%)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견기업 구간 적용이 어려운 상황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 432개 사(7.9%)(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활용 현황('19년)>

구 분	중소		중견		일반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625억 원	11.1%	249억 원	4.4%	4,751억 원	84.5%
일반 R&D 세액공제	19,971억 원	72.4%	2,228억 원	8.1%	5,377억 원	19.5%

* 기획재정부,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1.9월

-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여부 및 상장시장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려움

- 조세특례제한법 내 세제지원 중 상장시장을 요건으로 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유일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5조)'는 신규 상장 중견기업에 대해 추가로 공제 하였으나 상장시장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지 않았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해 상장 여부에 대한 제한도 삭제된 상황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성장·원천 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 실익을 높이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유사 입법례 : 중견기업 기술력 향상 및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는 중견기업 지원 대상을 매출 5천억 원 미만으로 적용

□ 건의 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현행) 매출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
(건의) 전체 중견기업 또는 매출 2조원 미만 중견기업

□ 현황 및 문제점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에 대해 기업승계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
 - *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국내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봉착, 해외 신시장 개척 등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상황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중견기업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및 대를 이은 장기 성장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
- 그러나,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비교>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평균
한국	가업상속 공제 건수(개)	46	58	70	68	67	76	91	103	88	74
	가업상속 공제금액(억원)	325	343	933	986	1,708	3,184	2,226	2,344	2,363	1,601
독일	가업상속 공제 건수(개)	5,123	6,124	8,061	10,141	11,085	11,885	10,747	10,311	11,368	9,427
	가업상속 공제금액(백만유로)	4,412	3,733	3,713	6,439	4,753	5,208	6,881	4,029	3,047	4,691
영국	2011-2018년 평균 2,620건, 1,801백만파운드										

* 코스닥협회,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세제, '21.5월

- 특히,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지속 경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
 -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육성할 경우 고용창출 및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기업당 216명을 고용하는 데 반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기업당 1,096명을 고용(중견기업 통계, '21년도 결산기준)

- 해외 주요국들은 직계비속이 기업을 승계할 경우 공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거나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

<주요국의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 혜택>

국가명	직계비속 명목 최고세율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 혜택	실제 부담 최고 세율
스페인	34%	가족 소유 기업인 경우 주식 가치의 95% 공제 (17개 지방정부 중 6개는 상속세 면제)	1.7%
벨기에	30%	일정 지분, 자본금 유지 등 기업승계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3.0%
아일랜드	33%	주식 가치의 90% 공제	3.3%
네덜란드	20%	상속 후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83%(107만 유로 초과)~100%(107만 유로 이하) 공제	3.4%
독일	30%	지분 및 임금 지급 유지 시 85~100% 공제	4.5%
프랑스	45%	환매 금지 조건부 지분 75%까지 공제	11.3%
영국	40%	상장주식 50%, 비상장주식 100% 공제	20.0%

* EY한영,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8

□ 건의 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매출액 5천억 원 미만 → 2조 원 미만)
및 공제 한도(최대 6백억 원 → 최대 2천억 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금전, 유가증권, 토지 등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나,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되어 비상장사는 연부연납 제도 활용에 애로

*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 비상장주식은 부동산 등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과세당국에서 비상장 물납 주식 부실화를 우려하여 까다로운 절차* 등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허가받기 어려운 상황

* 국세청-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 운영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관리

- 비상장주식을 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납세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조세정책의 일관성 결여

- 비상장 중견기업*이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지분율이 감소하여 경영권 분쟁 발생 우려

* 중견기업 현황('21년 결산기준) : **비상장 4,555개(83.1%)**, 코스피 453개(8.3%), 코스닥 467개(8.5%), 코넥스 5개(0.1%)

□ 건의 내용

-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 납세담보 허용(단, 일정기간 동안 불성실납세법인이 아닌 경우)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
 -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
-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오랜 기간 가업을 영위해 국가경제에 기여해 왔음에도 가업상속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광업·제조업·건설업 등은 전체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
 - 이에 따라 서비스업은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져 상속공제를 받지 못함

<제조업-서비스업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

광업 (05~08)	제조업 (10~33)	건설업 (41~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교육서비스업(85)
전체	전체	전체	연구개발업(70),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등 5개 업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등 7개 업종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등 4개 업종

- 특히, 서비스업은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 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사례
C사는 인력도급 관련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하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준산업분류 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나 주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 다른 분류코드로 등록되어 있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함

□ 건의 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 제외 업종*만 별도 규정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회 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승계 시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준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일정 지분율*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

*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 상장 30%→20%, 비상장 50%→40% ('23.2 개정)

- 여전히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경영권 분쟁 우려 증가

(상장회사 S사 사례)

최대주주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해 피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게 되었으나,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20%에 미달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함

□ 건의 내용

-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따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 디지털 전환 필요성 대두
- 중소·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추진 기업은 중소 16.7%, 중견 19.5%에 불과
 -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 애로 또는 지원 요청사항(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의 디지털 성숙도 조사, '21.12)
 - 자금지원 20.0%, 전문인력 확보 애로 20.0%, 디지털 전환 교육 20.0%, 인력 지원 13.3% 순
 -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애로사항(산업부·중견련,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21.12)
 - 투자비용 문제(46.7%), 성과 불확실(38.4%), 전문인력 부족(32.3%), 관련 인프라 부족(23.1%) 순

- 중견기업(조사 대상 416개)의 93.1%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추진 중인 기업은 19.5%에 불과
- 디지털 전환 대응 수준은 기초적인 1단계(49.8%)와 미추진 단계인 0단계(32.5%)가 대부분이며,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는 1.2%에 불과
-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사항은 투자비용 문제(46.7%), 성과 불확실성(38.4%), 전문인력 부족(32.3%), 관련 인프라 부족(23.1%) 순

<산업부·중견련,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2021. 12>

- 일본은 '21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IT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세제지원

□ 건의 내용

-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IT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법인세 최저한세제도로 인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 *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7%, 중견 1~3년 차 8%, 4~5년 차 9%, 그 외 중견·대기업 10~17%
- 최저한세제 적용에 의한 증가세액은 중소기업은 8천만 원 수준이 반면, 일반법인(중견·대기업)의 경우 평균 53.3억 원으로 조세부담 급증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 기초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8.2월
- 최저한세제도로 인해 각종 세제지원의 실익 없이 이월공제만 쌓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유인 부족
 -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저한세율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R&D 세액공제도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금액이 줄어들고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OECD 국가 중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 헝가리,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4개국에 불과

□ 건의 내용

- 중소·중견기업의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 * (現) 중견기업 1~3년 차 8%, 4~5년 차 9%, 6년 차 이상 10~17% ⇒ (案) 전체 중견기업 8%
- 중견기업의 R&D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 R&D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 제외